



DAERYUN NEWSLETTER VOL.17

[대륜 뉴스레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2014년 10월 시행된 이른바 '단통법'은 소비자 가격 인하 체감 부족, 이통사-제조사 간 담합 구조 고착, 중저가 단말기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6월 해당 법률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며 새롭고 유연한 시장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유통 시장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총기 규제 국가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불법총기 및 폭발물 제작법을 학습해 직접 총기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 국내에서 인터넷 정보만으로 누구든 강력한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LEGAL INFORMATION

법-키피디아

7월부터 달라지는 채권회수 제도

로맨스캠 주요 수법 및 피해 대응 방법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와 계산 방법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전직 대통령 관련 고위 군 인사, 청문회 위증 혐의 구속영장 기각

뇌물수수죄 혐의 공무원, 항소로 징역형 파기

상해죄 등 3개 혐의, 소년보호재판 진행했지만 불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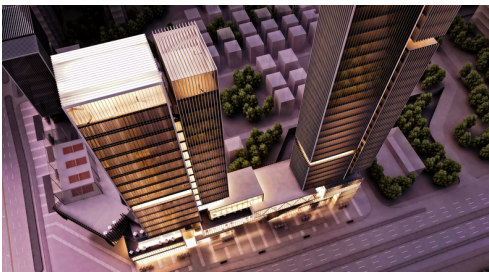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에도 기소유예

의료사고 피해 유족, 1억 원 손해배상금 지급 받은 사례

INSIGHTS

언론 속 대륜

경기일보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리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원상회복 의무를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사업운영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공무원은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은 정재봉 변호사는 행정상 잘못이었을 뿐 사적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국제신문



'강제집행 피하러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겨 1심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륜 고정향 변호사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끈 핵심 전략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신문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정일보



"수천 명에게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추진

법무법인 대륜이 자산운용 서비스를 내세운 UK플랫폼의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나섭니다. UK플랫폼은 추천인 제도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다단계 형태의 폰지 사기로 인해 피해자는 수천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CONTACT

김국일

대표총괄변호사

T. 070-5117-2950

조영곤

대표총괄변호사

T. 070-7510-2014

이일권

대표총괄변호사

T. 070-7510-1822

김철

대표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조영삼

대표총괄변호사

T. 070-7510-2014

안권섭

대표총괄변호사

T. 070-5221-3616